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 1. 감사 목적

-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2. 감사 기간

- 2025. 11. 4.(화) ~ 11. 17.(월) <14일간>  
※ 제333회 정례회 : 2025.11. 3.(월) ~ 12.23.(화), <50일간>

## 3. 감사 대상 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5곳)   |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1곳)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도시공간본부</li><li>○ 균형발전본부</li><li>○ 디자인정책관</li><li>○ 미래청년기획관</li><li>○ 글로벌도시정책관</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li></ul> |

## 4. 감사위원회 구성

| 구 분   | 소속정당   | 위 원 명 | 사무보조 직원  |
|-------|--------|-------|--|
| 위 원 장 | 국민의힘   | 김길영   |  |
| 부위원장  | 국민의힘   | 이상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전문위원 조성준</li> <li>· 의사지원팀장 김재민</li> <li>· 전문위원 이성엽</li> </ul> |
|       | 더불어민주당 | 임규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조사관 권수정</li> <li>· 입법조사관 박성원</li> </ul>                       |
| 위 원   | 국민의힘   | 김원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조사관 허지정</li> <li>· 입법조사관 이주병</li> </ul>                       |
|       | 국민의힘   | 민병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무관 공현주</li> <li>· 주무관 양세인</li> </ul>                           |
|       | 국민의힘   | 서상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무관 김연희</li> <li>· 주무관 장미영</li> </ul>                           |
|       | 국민의힘   | 윤종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지원관 김영광</li> <li>· 정책지원관 김유진</li> </ul>                       |
|       | 국민의힘   | 허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지원관 윤주이</li> <li>· 정책지원관 이주호</li> </ul>                       |
|       | 더불어민주당 | 송재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지원관 이지영</li> </ul>  |
|       | 더불어민주당 | 임종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기 및 녹취 : 3명</li> </ul>   |

## 5. 감사 일정별 대상기관 및 장소

| 일 시              | 감 사 대 상 기 관       | 장 소       |
|------------------|-------------------|-----------|
| 2025. 11. 4.(화)  | 도시 공간 본부          | 도시계획균형회의실 |
| 2025. 11. 5.(수)  | 휴 감<br>(자료정리)     |           |
| 2025. 11. 6.(목)  | 균형 발전 본부(1일차)     | 도시계획균형회의실 |
| 2025. 11. 7.(금)  | 균형 발전 본부(2일차)     | 현장        |
| 2025. 11. 10.(월) | 디자인 정책관<br>디자인 재단 | 도시계획균형회의실 |
| 2025. 11.11.(화)  | 미래 청년 기획관         | 도시계획균형회의실 |
| 2025. 11.12.(수)  | 휴 감<br>(자료정리)     |           |
| 2025. 11.13.(목)  | 글로벌 도시정책관         | 도시계획균형회의실 |
| 2025. 11.14.(금)  | 휴 감<br>(자료정리)     |           |
| 2025. 11.17.(월)  | 휴 감<br>※ 운영위원회 행감 |           |

## 6. 주요 감사사항

가. 감사방법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 · 청취, 시책질의 · 답변

나.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 기관명    | 주요 감사사항  |
|--------|--|
| 도시공간본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도시공간 정책 결정 및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li>○ 도시계획 용도지역 · 지구, 구역의 지정 · 운영에 관한 사항</li><li>○ 정비사업, 주택공급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li><li>○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수립 · 결정에 관한 사항</li><li>○ 서울대개조 관련 정책 수립, 국가상징공간 조성 업무 추진현황</li><li>○ 녹지생태도심 마스터플랜 수립·운영, 재창조 전략 추진</li><li>○ 경부간선도로 일대 공간개선 구상,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현황</li><li>○ 공항권역 고도제한 국제기준(ICAO) 개정안 대응 발전방안 추진현황</li><li>○ 용적이양제(TDR) 도입 및 거래관리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li><li>○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제한구역 신규·재지정 검토 등 총괄</li><li>○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및 관리</li><li>○ 지적 및 토지행정 기본계획 수립 · 시행,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부동산 중개업 등 관리 현황</li></ul> |
| 균형발전본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균형발전정책 수립 및 총괄·관리</li><li>○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li><li>○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재구조화</li><li>○ 도심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및 남산골돌라 도입 추진</li><li>○ 도시개발 체비지 운영 및 관리</li><li>○ 동북권 창동·상계 동북권역 경제거점 조성 사업 총괄·조정</li><li>○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총괄·조정</li><li>○ 서북권 신산업 전략거점 조성 및 수색·DMC역 복합개발 사업추진 현황</li><li>○ 서남권·동북권 신규 거점사업 추진 현황</li><li>○ 광화문광장 종합운영계획 및 세종로공원 정비사업 등 광화문 광장 일대 편의·상징성 강화 관련 사업 총괄·조정</li></ul>  |

|         |   |
|---------|---|
| 디자인 정책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정책 수립 / 디자인서울 2.0 기반조성</li> <li>○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진흥</li> <li>○ 디자인재단 지도·감독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관리·운영</li> <li>○ 디자인산업 정책기반 조성 / 디자인 협력 개발 및 확산</li> <li>○ 디자인전문기업 지원 / 중소기업의 디자인 활용지원 사업 추진</li> <li>○ 도시빛 기본계획 수립 및 야간경관 개선</li> <li>○ 좋은빛 환경조성 / 빛 활용 축제·미디어 사업 추진 / 옥외 광고물정책 총괄 기획 등</li> </ul>   |
| 미래청년기획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정책 기본계획·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li> <li>○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의체 운영지원</li> <li>○ 청년참여기구 운영, 청년자율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li> <li>○ 청년수당 사업 운영 및 관리</li> <li>○ 미래 청년 일자리, 직무체험 프로젝트, 청년쿡 등 일자리·창업 관련 사업 시행</li> <li>○ 서울 영테크,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등 금융 관련 사업 시행</li> <li>○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관리</li> <li>○ 청년 마음건강 사업,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시행</li> <li>○ 청년정책 홍보 및 소통 전략계획 수립·시행 등</li> </ul> |
| 글로벌시책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민·외국인정책 관련 정부 협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li> <li>○ 외국인 인재 및 유학생 유치 확대, 정착 유도 및 지원</li> <li>○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운영 및 관리</li> <li>○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생활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기획·조정</li> <li>○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사업</li> <li>○ 문화다양성 및 다문화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li> <li>○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해외 지역과의 국제 교류 활동에 관련된 사항</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지역의 교민, 시민·민간단체와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li> <li>○ 서울특별시 각종 국제회의 총괄 및 조정</li> <li>○ 국제기구·회의유치 및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li> <li>○ 서울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li> <li>○ 국제개발협력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li> </ul>   |
| ( 재 ) 서울<br>디자인재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디자인 행사, 전시회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사항</li> <li>○ DDP 운영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li> <li>○ DDP 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및 구축에 관한 사항</li> <li>○ 디자인인재발굴 및 비즈니스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li> <li>○ 서울디자인브랜드 및 DDP 자체 브랜드 정체성 확립 및 상품개발과 확산에 관한 사항</li> <li>○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및 관리 운영 등</li> </ul> |

## 7.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 (1) 감사사항 총괄

| 기 관 별    | 계   | 시정<br>요구사항 | 건의 및<br>기타사항 | 자료요구 |
|----------|-----|------------|--------------|------|
| 계        | 195 | 144        | 36           | 15   |
| 도시공간본부   | 36  | 26         | 10           | -    |
| 균형발전본부   | 41  | 30         | 10           | 1    |
| 디자인정책관   | 26  | 20         | 5            | 1    |
| 미래청년기획단  | 34  | 23         | 4            | 7    |
| 글로벌도시정책관 | 35  | 26         | 6            | 3    |
| 서울디자인재단  | 23  | 19         | 1            | 3    |

## (2) 주요 지적사항

### 가. 시정 요구 사항

..... 144건

#### [도시공간본부] — 26 건

1. 신속 통합 기획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224개 사업지 중 실제 착공은 2곳뿐이며, 80%가 구역 지정 단계에서 멈춰 있는 것은 제도의 추진력이 매우 낮다는 방증임. 구역 지정 과정의 병목 현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 절차 개선과 사업 촉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 필요함. 또한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 완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과 용적률 보정 개수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평당 건설비와 감정평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 정비가 반드시 수반돼야 함.
2. 서울시가 제시한 주택 공급 목표와 실제 성과의 격차가 크고, 착공 실적도 감소 추세여서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음. 특히 신속 통합 기획, 공공재개발 등 주요 공급 수단이 초기 단계에서 정체되면서 공급 속도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행정 절차 단축, 인센티브 설계, 민·관 역할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공급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행 전략 마련이 필요함.
3. 재건축단지 학교용지 지정과 관련, 국토계획법이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위치·규모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부방침만으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법적 절차 위반 여부 검토가 필요함. 내부 방침에 의존하기보다 교육청과 협의체계 강화하고 지역별 학령인구, 생활권 분석을 토대로 학교용지 지정 기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4. 대학 지역기여시설의 결정·운영 과정에서 주민의결 수렴 절차와 반영이 미흡하고, 설치 후 관리 기준·사후 평가·페널티 체계 부재로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5. 미래서울도시관은 시민의견 미반영, 세계도시관 기획 미흡, 도시모형 중복, 부서 간 이원화 등 우려를 해소하여, 전시 중심이 아닌 정책·체험 기반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반영하기 바람.
6.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시 리스크 항목을 관행적으로 ‘해당 없음’으로 기재해 형식화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간·비용 증가가 반복되고 있어 사전 심사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만큼 심사 실효성 제고 및 구조적 개선을 마련하기 바람.
7. 서울역 개발 관련 중앙-지방 계획이 협의 없이 중복 추진되고, 타당성 심의도 형식에 그쳐 용역 반복·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획 조정·타당성 심의 실효화·용역 연계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함.
8. 공공기여시설은 개발이익 환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공적 편익을 제공해야 하나, 현재는 기부채납 이행 여부만 확인하는 등의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고 있음. 준공 시점에 맞춰 시설용도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장기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 바람.
9. 개발사업 추진 시 다수의 위원회를 거치면서 심의 절차가 중복되고, 다양한 의견이 교차해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의 절차를 일원화·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현행 제도는 비오톱 1등급지의 복원·이전·관리 비용을 토지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고 형평성이 저해

되는 상황임. 도시의 환경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유지·관리 비용을 공공이 함께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한양도성권을 서울의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실제 정책은 보존과 규제 중심에 머물러 도심의 생활·정주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역사 보전과 도시활력이 조화를 이루도록 종로 북부의 정주 기능 회복을 위한 실질적 도시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12. 종로 북부는 직(職)과 락(樂)은 남고 주(住)는 사라지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도심의 일상적 기능이 붕괴되고 있음. 도심의 인구 유입과 생활 기반 복원을 위한 주거 기능 강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13. 최근 언론 보도에서 드러났듯 정비사업이 계획 대비 실행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이는 계획 - 집행 - 평가 - 환류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됨. 도시공간본부는 계획 수립부터 집행·평가·환류까지 전 과정이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해 도시정비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바람.
14. 2월 1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후 불과 35일만인 3월 1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정책의 혼란이 결국 10월 15일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함.
15. 2월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3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큰 혼란을 빚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 업무는 주택실이 아니라 도시 공간본부에 있는 것이 타당하므로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다시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16. 용적이양제를 기도입한 일본·미국과 우리나라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 향후 제도 도입시 거래 가격·방식 산출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면밀히 검토해서 안정성 강화할 필요가 있음.
17. 서울 전지역 토허제 지정 관련, 서울시 부동산동향 분석시스템 활용해 거래량 감소에 따른 지방세 손실분 등 예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필요.
18. 국토부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에 경인선 등 서울시 주요 철도 구간이 차질 없이 담길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강화해주기 바람.
19. 관광숙박특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등 인센티브 마련 시 특화구역 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가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
20. 시교육청 부지교환, 서울역사박물관 이전부지 검토 등 경희궁지 역사문화공원 조성계획이 아무런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돈의문 박물관마을만 운영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므로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종료를 재검토하기 바람.
21. 도시공간본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올 때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데 정작 발표만 하고 추진되는 일이 없으며, 구도심을 그대로 두고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인지도 의문임.
22.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주택·용적률 정책이 엇갈리며 협의 부재로 주민 피해와 정책 간극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과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조율이 시급함.
23. 입체공원 사업은 특정 지역 편중이나 선입견 없이, 형평성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지를 선정하기 바람.

24. 서울시 정책에서 유사한 개념임에도 용어가 제각각 사용되거나 시기마다 명칭이 바뀌어 정책 이해와 실행에 혼선을 주고 있음. 행정 신뢰성과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 용어와 정의를 일관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25. 서울의 도시 발전 전략은 지역 고유의 특성과 구조를 기반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사람의 이동성과 유동성을 중심에 둔 공간 설계가 요구됨. 목적지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연결되는 ‘유동적 도시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26. 심의위원들의 출석률 저조와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심의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음. 특히 위원이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경우 회피 규칙이 철저히 적용되어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공정한 참여를 통해 심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관리가 강화되어야 함.

## **[균형발전본부] — 30 건**

1. 남산ゴ돌라 소송 자연으로 인해 기 출범한 곤돌라인수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2. 국토부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한 것과 관련, 곤돌라 사업 시작 전부터 논의가 되었다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국토부에 적극 의견 개진이 필요함.
3. 경관 정책이 문화재·자연 중심의 보존 행정에 머물러 있어 초고밀·복합 도시로 변화한 서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밀도

국가 기준에 기반한 경관 관리가 지속되고 있음. 아파트·스카이라인·생활권 공간 등 시민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도시 경관을 서울의 얼굴로 인식하고, 경관정책을 보존 중심에서 창의 중심으로 전환하기 바람.

4.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자치구 간 편차를 해소하기 바람.
5. 균형발전본부가 실질적 편성권을 확보해 균형발전 목적에 맞는 예산을 주도적으로 편성하도록 기조실에 적극 요구하기 바람.
6. 남산골돌라 사업은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인수단 운영·홍보예산이 계속 집행돼 재정 효율성과 정책 효과가 미흡하므로, 예산 집행 타당성·단계별 대응계획·홍보 전략 개선을 마련해야 함.
7. 다락원체육공원 GB관리계획 변경 용역의 타절준공은 기초검토 부실의 결과이므로 시설률·건폐율 사전검증 강화와 내부 전문성 활용으로 예산 낭비 방지 필요함.
8.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시 리스크 항목을 관행적으로 '해당 없음'으로 기재해 형식화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간·비용 증가가 반복되고 있어 사전 심사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만큼 심사 실효성 제고 및 구조적 개선을 마련하기 바람.
9. 우당기념관은 관리 부실·성과 과대평가 등 운영 전반의 개선이 시급함.
10. 균형발전본부의 명소화 시설은 문화본부로의 이관이 가능 정합성과 장기 운영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토하기 바람.
11. 국립보건원 부지 혁신파크 사업이 4월 입찰 무효 이후 7개월간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결단이 필요함. 서울시는 지연된 절차를 정비하고 사업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함.
12. 혁신파크 사업에서 용적률 급상승과 종상향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

고 있으며, 공공부지를 매각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음. 민간 매각보다는 주택 공급 등 시민 수요 중심의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13. 국가상징공간 사업이 정당성 확보와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의회 보고도 불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조형물 설치가 국가 위상이나 시민 자부심과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의미와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
14. 국가상징공간 사업의 긴급 입찰이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은 채 협상 계약 형태로 진행되었고, 통일교 재단 소관 업체가 선정되면서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15. 광화문 광장 사업은 2024~2025년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복적으로 증액되었으나, 의회에 제출된 금액이 매번 달라지고 있음. 예산 증액의 사유와 근거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투명한 관리가 요구됨.
16. 서울시가 강남 3구와 도심 중심으로 정책을 집중하면서 중랑구 등 외곽 지역에는 맞춤형 발전 전략이 부족함.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 발전 전략 수립이 시급함.
17. 남산 케이블카 사업이 법적 분쟁 상황에서 서울시의 대응이 미흡한 데다, 관련 고위 공무원이 해당 로펌에 재취업하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법적 대응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18. 2021년 6월 도시재생 재구조화 발표 이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지, 기 투입된 마중물 사업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마중물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이나

생활SOC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규정이 아직까지 모호하므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함.

19.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이 지난해 100미터 태극기 게양대에서 올해 설계공모를 통해 감사의 정원으로 변경됐는데도 100미터 태극기 게양대로 편성된 예산을 이월해 변경 절차 없이 집행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큼.
20.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운영·관리 체계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안전 운영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음. 유지관리비 추계, 관리주체의 역할, 안전운영 매뉴얼을 설계 단계에서 명확히 제시해 시민 이용 안전을 확보하기 바람.
21. 도시재생기금은 집행률 저조와 불용 반복 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업 성과 관리 및 사전 타당성 검증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집행률을 제고하고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 검증 절차와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바람.
22. 남산 곤돌라 사업은 단일 교통수단 중심의 검토로 인해 이동권 확대와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대안 검토가 부족한 실정임. 곤돌라뿐 아니라 모노레일, 전기셔틀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병행 검토해 남산을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기 바람.
23. 곤돌라 소송 지역으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남산 관련 홍보 사업들이 추진 불가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소송과 별개로 남산 전체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곤돌라 외 남산 관련 홍보 컨텐츠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
24. 감사의 정원 관련하여 사업 초기 국가상징공간 논의 단계부터 일정, 추진 방식, 규모 등을 두고 혼선이 심해 신뢰도가 하락한 측면이 있으므로

로 추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논쟁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주기 바람.

25. 현재까지 진행한 재생사업 현황과 결과 등에 대한 정리 작업이 필요함.
26. 남산 곤돌라 재판이 길어지면서 한국삭도공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고 시민들은 남산을 이용하기 더 어려워졌으므로 재판결과만 기다릴 게 아니라 케이블카가 아니라도 남산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함.
27.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 교량 건설사업 준공이 세차례 연기되며 거의 완공단계인 보행교와 보·차도교가 1년 이상 방치되고 있으며, 인근 상계동 주민들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된 2007년 10월 이후 18년째 공사현장에서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음.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정책으로 준공을 서둘러야 함.
28. 오세훈 시장의 공약에 따르면 공릉동 한전연수원은 2022년 업무협의, 2023년 계획 수립, 2024년 설계, 2025년 하반기 착공 일정인데 아직도 업무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단계에서 정부는 정부자산 매각 중단을 발표했음. 변화된 상황에 빨빠르게 대응해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
29. 남산 생태 여가 활성화 계획 용역에서 수행 업체 대표가 건축위원, 도시재생위원, 동대문 DDP 관련자로 활동하고 있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함.
30. 현대차 GBC 프로젝트가 장기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지역 개발 효과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의료원 부지도 공사 마무리 이후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대책 수립이 시급함.

## [디자인정책관] — 20 건

1. 서울색 사업이 매년 색상이 바뀌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시민 인지도도 낮은데다 색상 명칭도 추상적이고 직관적이지 않아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음. 시민 의견 반영 여부 역시 불명확하므로, 통일성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서울색 개발에 매년 약 2억 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도시경관·조명·건축 등 관련 부서들과의 연계가 미흡해 실제 적용과 확산 효과가 낮은 실정임. 색상 개발에 그치지 않고 굿즈, 조형물, DDP, 건축물 조명 등과 연계한 구체적 활용 시스템과 협의체를 구축하여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확산 전략이 필요함.
2. 서울시 사업명칭에서 ‘Fun Station’, ‘Fit Station’, ‘Runner Station’ 등 외래어·조어 사용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13조의 취지에 맞게 시민이 일상에서 널리 쓰는 표현을 우선 사용하도록 용어 기준을 정비하고, 공공언어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마련하기 바람.
3. 서울서체는 단순한 글꼴이 아니라 서울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 자산임에도, 이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전략과 문화외교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서울서체가 도시브랜드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세계 도시와 협력할 수 있는 문화외교 매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글로벌 확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바람.
4.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2025년까지 1,521점이 선정되었으나, 재인증 비율이 22%에 그치고 설치 위치·사용 기간·유지관리 현황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인증 이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의 시민 의견 수렴 기능이 실제

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보완하기 바람.

5. 도시경관개선사업은 성과지표가 불명확해 사업의 우수성과 미흡한 점을 판단할 기준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행정 책임 또한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공공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검증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성과지표를 정립하고, 그 지표에 따라 평가받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바람.
6. 빅워크 업무협약서 문구를 지적 후에야 수정·재체결하는 등 사전 검토가 미흡했음. 협약 체결 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함.
7.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중 '라이트 런' 사업은 향후 서울시 직접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코스 협소 등 안전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8. DDP 내 카페드페소니아의 무단점유 및 계약 종료 이후 진행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함.
9. 디자인기업 안심보험의 보장내역이 「디자인산업발전 5개년 계획」 당시 계획과 상이함. 최초 보험 설계 단계에서 사업성, 보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어야 함. 향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보장내용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10.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중요 사안에 대한 보고체계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하기 바람.
11. 빛공해방지계획수립 용역의 업체 전문성·평가 공정성·계약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람.
12. 서울경관기록화(7차) 용역의 무단 하도급·구두 승인 등 계약관리 부실과 절차 위반 등 잘못된 관행이 남지 않도록 하고 전면 재검토하기 바람.
13.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단속할 때만 사라졌다가 단

속이 끝나면 다시 나타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거리 질서를 확립 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4. 코엑스에 이어 명동과 광화문 일대가 옥외광고물 특구로 지정됐고 동대문 일대도 추진 중인데 광화문 일대의 경우, 빛공해와 교통안전문제 뿐 아니라 국가상징공간인 광화문광장과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문화회관 등 기존 시설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15. 균형발전은 도시 외형 개선이 아니라 정책의 혜택이 더디게 미치는 종로 북부 등 생활현장의 시민이 대상이어야 함에도, 현 정책은 외형 개선에 집중되어, 주민 중심 접근이 부족한 상황임. 실행 과정에서 기회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목표와 실행을 정합성 있게 추진하기 바람.

16. 종로 북부는 직(職)과 락(樂)은 남고 주(住)는 사라지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도심의 일상적 기능이 붕괴되고 있음. 도심의 인구 유입과 생활 기반 복원을 위한 주거 기능 강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17. 서울 도시디자인 정책은 시민이 한눈에 인지할 수 있는 대표 성과나 실물이 부족하며, 이벤트나 행사 유치에 치중하면서 실질적·가시적인 디자인 결과물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보여줄 수 있는 실물 중심의 성과 창출이 필요함.

18. 편 디자인 벤치 등 실물 디자인 사업은 제작비가 8~900만 원 수준으로 과도하다는 시민 반응이 많으며, 체감도나 실용성도 낮아 비용 대비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실효성 중심의 사업 재구조화가 요구됨.

19. 도시디자인 정책이 예산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으며, 같은 문제가 2022년 행감에서도 제기되었음에도 2년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과 책임 있는 개선이 필요 함.
20. ‘고서울(go SEOUL)’ 로고 개발에 12억 원 이상을 투입했음에도 쿼 서비스 업체 로고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저작권 검증과 디자인 유사성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래청년기획관] — 23 건**

1. 서울시의 은둔·고립청년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나, 성과지표가 상담 건수와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 한정되어 정책효과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향후 은둔·고립청년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투자 확대가 필수적인 만큼, 사회 복귀 여부를 중심으로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양적 지표 중심의 숫자 행정을 개선하기 바람.
2. 서울청년기지개센터는 직접 방문이 가능한 청년 중심의 이용 구조로 인해, 도움이 절실한 은둔·고립청년에게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음. 권역별 아웃리치팀을 구성해 심리상담·복지·고용을 연계하는 찾아가는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바람.
3. 청년 지원정책은 명확한 성과지표 없이 평가만 반복하는 구조에 머물러,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청년 복귀율 및 복귀 유지율 등 실질적 사후관리 지표를 마련하고, 복귀 이후 생활안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바람.

4. 2025년 상반기 통계청 지역고용조사에서 종로구 청년고용률이 29.7%로 서울 평균에도 크게 미달한 가운데,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정책이 지역의 고용 구조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됨. 청년고용률 개선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고, 종로의 산업 구조와 청년 수요 간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마련해 주기 바람.
5. 전세사기, 해외취업사기, 로맨스스캠, 투자사기 등 다양한 범죄의 주요 피해자가 20~30대 청년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년 대상 사기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청년정책의 중심을 기회 제공 중심에서 위험 예방과 안전망 강화로 전환해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6. 청년들의 금융교육을 담당하는 영테크 용역업체가 재정난으로 파산한 것과 관련, 업체 선정 당시 재무 상태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검증·관리 절차 도입이 필요함. 시중 금융권 회사들도 여러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협업을 통한 강사풀 활용 등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람.
7. 신규사업인 대학생 동아리 지원사업 활동계획을 보면 본 사업 취지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는 상관 없는 축제 예산 지원이나 사업 목적과 다른 활동계획이 다수 있음. 정산 과정에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람.
8. 미래청년일자리 사업은 용역 쪼개기·긴급입찰 반복·성과평가 부재, 고용 성과 저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 함.
9. 미래청년기획단 사업이 사무관리비 편성으로 평가체계밖에서 반복되고, 정례사업임에도 긴급공고를 지속해 공정성과 개방성이 저해되므로 개선

이 필요함.

10. 서울청년예비인턴사업은 단기·형식적 구조와 일반용역 편성으로 성과 관리·사후체계가 부재하고, 기업검증·중복참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1. 청년정책 교육 의무 미이행과 형식적 운영으로 실질적 교육체계 정비와 이수관리 강화가 필요함.
12. 청년수당 콜센터 운영 용역의 수의계약 사유·계약서류 오류 등 계약관리 부실이 확인되므로 시정과 절차 준수에 주의해야 할 것임.
13. 영테크 사업에서 최근 금융사기와 사고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사업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었고, 민원과 위험 신호가 오래전부터 존재했음에도 서울시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됨. 청년들이 경제적 취약성에 따라 고수익 기대 심리에 빠지기 쉬운 상황에서, 사업이 포퓰리즘적 요소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음. 또한 내부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만큼, 서울시의 관리 실패가 명백함. 상담사 검증 체계에 허점이 있으며, 보험·증권 판매직에 종사하는 상담사들이 금융상품 판매로 이익을 얻는 구조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담사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점이 큰 문제임. 자격 요건, 상담사 검증 방식, 이해충돌 위험 차단 등을 재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14. 영테크 위탁 운영업체 중 한 업체가 재정난으로 폐업하면서 재무 상담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업체인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위탁업체 선정 구조 자체에 문제점이 있어, 근본적인 구조 재설계가 필요함.
15. 청년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등 주거분야 집행률이 2025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잡아놓은 목표의 4분의 1, 7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데 토지임대부주택이나 사회주택 모델처럼 서울시에서 투여하는 예산의 두 배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주택실과 논의하기 바람.

16. 자기성장 기록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수혜자격이 정지되는 청년수당 중도탈락 청년의 비율이 16%에 달하는데 이 중에는 본인은 이메일로 제출했는데 서울시에서 받지 못했다고 한다는 민원도 있으므로 억울한 중도탈락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기 바람.
17. 시가 운영하는 청년직무캠프, 예비인턴, 미래청년일자리사업 등 각종 청년일자리사업의 중복 지원을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18. 청년 일자리사업에 연속 참여하는 기업들의 경우 재선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인건비 및 인력 지원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19. 해외봉사단 운영 중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사업 고도화 방안 검토가 필요함.
20.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상 청년의 연령 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미래청년기획관의 다른 사업은 모두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 청년수당 사업만 대상을 34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35세 이상에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많으므로 서울 청년수당 대상을 39세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기 바람.
21. 올해부터 청년수당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서울런 참여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데 서울련은 6세 이상 24세 이하 저소득층의 입시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년수당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혀 성격이 다른 사업인데 우선권을 주는 것은 부당한 정책 오류임.

22.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재무설계, 투자교육 등 영테크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던 회사인 위크노미가 정작 자기 회사 관리를 못해서 부도 나고 폐업했는데 이는 민간위탁 업체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임.
23.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과 프로그램은 AI 등 기술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 취업 지원 사업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취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청년센터 멘토링, 청년 예비 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등 기존 프로그램들이 시대 변화에 맞는지 점검하고,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함. 서울시는 청년층의 고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

## **[글로벌도시정책관] — 26건**

1.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보장과 관련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데 힘써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임. 외국인 노동자 고용 기업 등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하는데 문제의식의 맥을 잘못잡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임.
2. 서울시장의 외국인 면담 일정을 보면, 노들섬 국제설계 공모에서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되기 전에 토마스 헤더윅과 사전에 만나서 노들섬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현장을 같이 둘러보고 개인전 오프닝에도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임. 단순히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3. 국제개발협력 ODA 예산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해 12월이고 올해 3월과 4월에 걸쳐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있었는데 아직도 수사결과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내부 감시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차제에 시스템을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서울시는 다양한 해외 도시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서별로 개별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로 인해 도시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도시외교 사업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정책 효과를 높이기 바람.
5. 도시 간 교류·협약은 증가하고 있으나, 교류 이후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성과 설명이 부족해 정책의 실효성 판단이 어려운 상황임. 단순 교류 확대에서 벗어나 교류 이후의 변화와 성과를 시민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6. 해외재해구호 사업은 인도주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형평성과 행정 책임성을 확보할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부족함. 재해구호 사업에도 기준·절차·평가를 명확히 설정해 도시외교와 재해구호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기 바람.
7. 건설 현장, 물류창고, 제조공장, 숙박·요식업 등 서울의 주요 노동현장에서 미등록 외국인의 노동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공식 통계와 복지 체계가 부재해 ‘보이지 않는 인구’로 남아 있는 상황임. 서울의 도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조사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8.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등록 아동이 최대 1만 3천 명으

로 추정되며, 상당수가 서울·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행정상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기본적 지원에서 누락되고 있음.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미등록 아동·청년이 방치되지 않도록 실태 조사와 지원 방향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9. 미등록 외국인의 임시체류 종료 이후, 서울시가 단속 대상인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보호할 대상인지에 대한 정책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임. 미등록 외국인 및 아동·청년에 대한 대응 원칙을 정립하고, 보호와 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10. 테크스칼러십 모집 인원 대비 지원 인원 저조 문제 해결 방안과 경기도 소재 캠퍼스를 생활권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생활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11. 테크스칼러십 장학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정착과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이 미리 마련되어야 하며 정책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서울시 정책 홍보 등 의무 활동 사항을 늘리는 것에 대해 추가 검토하기 바람.
12.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서울시 재원도 투입된 만큼 지금 외국인에 대한 세부 데이터를 확보, 향후 시 외국인 정책 설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바람.
13. ODA 사업이 도시정책관에서 예산 편성하고 SH 산하 기관이 수행하는 구조는 비정상적이며, 이 편법적인 구조가 비리를 초래했음. 특히 사후 정산 방식에서 구조적 허점이 존재하고, 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ODA 전체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서울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의회와 공유해야 함. 또한, 캄보디아 사업 내용이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다르게 기재되거나 누락된 정황이 있어, 사업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14. 국제협력과 내에서 과장과 임기제 공무원의 부적절한 결탁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단순 개인 비리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심각한 상황임.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15. 서울시는 현재 '마스터플랜·정책 자문' 등 용역 사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사후 관리와 성과 평가 체계가 전혀 정비되지 않은 상태임. 용역 사업 이후 무엇이 개선되었는지, 사업이 본 사업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후속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됨. SH가 해외 ODA를 수행하는 이유에 대해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ODA 사업 전체 마스터플랜을 다시 정립하여 절차, 기준,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재구성이 필요함.
16. 가사사용인 사업 관련,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입 방식 및 인센티브에 대한 해외 사례 등 용역을 진행하거나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 있음.
17. ODA 챌린지 사업의 경우 서울이 선진 정책을 선제안하고 해당 정책의 도입을 원하는 국가들을 발굴하는 형태의 사업 방식도 논의가 필요 해보임.
18. 민간위탁시설 채용·인력운영의 불안정·편법 요소 개선과 채용심사위원 중 외부위원 과반 구성 등 공정한 절차 확립이 필요함.
19. 글로벌유학센터의 경우 외국인·유학생 지원시설 간 중복사업과 저효율 구조를 통합·조정해 기능 재정립과 예산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0. 출입국업무 불편이 서울글로벌센터 전체 신뢰도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법무부와 협력해 민원환경 개선·인력 확충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 함.

21. 외국인정책 마스터플랜의 성과 부진과 추진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실 행력·성과관리·재설계가 시급함.
22. 24시간 운영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의 예산이 부족해 종사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조차 내외국인 간 예산상의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23. 2023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출생신고 없는 아동이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이 두 배임. 경기도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데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경우 발굴이 어려우므로 발굴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함.
24. 글로벌센터 빌딩의 2층 외교부와 법무부 공간은 주민자치센터보다 열악한 상태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함.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공실 문제와 낮은 임대료, 위탁 경영 문제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함. “공실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답변 대신, 실제 현황을 명확히 확인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며, 임대 및 운영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네이밍라이즈를 활용한 민간 협력 방안을 통해 운영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25. 국제회의장이 비어 있는 시간이 많고 홍보가 부족해 대관 및 홍보 체계 전면 개선이 요구됨. 현재 글로벌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불가능하고, 대관 신청이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서비스 이용’ 페이지로 우회해야 하는 비효율적 구조가 문제로 지적됨. 이 시스템을 개선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함.
26. 글로벌도시정책관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국제기구 유치’가 지난 1년 동안 성과가 전무한 상태임. 국제기구의 정의 재정립과 비소속 상태의

기구들, 신규 설립 예정 기구 등에 대한 타겟팅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기본 업무 프레임 자체의 재정비가 필요함.

## [서울디자인재단] — 19 건

1. 디자인재단이 최근 경영평가에서 조직·인사관리 점수가 평균 이하로 매우 낮게 나왔으며, 특히 2024년 채용 실태조사에서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임의로 적용한 문제가 드러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내부 직원들의 업무태만, 이직률 증가, 전문성 부족 등 조직문화에 대한 불만도 이어지고 있어 조직 인력 체계 컨설팅 용역 결과를 단순 용역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개선에 활용해야 함.
2. 유구전시관 이전·전시 사업은 지난해 추경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10억 원을 확보했음에도 1년 넘게 진척이 없어 준비 없이 예산만 확보한 전형적인 행정력 낭비 사례로 지적됨.
3. 디자인재단이 보일러 문제와 같은 기초적인 시설 문제로 형사 고발까지 당한 것은 기본적인 행정 대응 능력과 소통 체계가 부족하다는 방증으로, 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4. 디자인재단 이사장이 재단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의회 질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나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책임 있는 대응이 부족함. 특히 DDP 운영과 관련해 SBA 위탁 사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기본적인 행정 책임도 다하지 못하고 있음.
5. 새활용 플라자 사업이 디자인재단 본연의 업무와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해당 기능은 서울창업허브 등과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재단의 사업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재조정할 필요

요가 있음.

6. DDP 공간을 SBA에 위탁하면서 발생한 수익 및 업무 분담 문제에서 디자인재단은 본래 수행해야 할 업무를 SBA에 떠넘기는 동시에 SBA 위탁 업무까지 대신 수행하는 이중 구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간 회수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7.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은 연간 약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사업 개념, 실행 계획, 추진 현황이 명확하지 않고, 센터의 역할과 책무도 정리되지 않아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임. 구체적 실행 계획과 행정 절차,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재단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요구됨.
8. 서울디자인재단은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가치가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실질적 포용성 확보가 미흡한 상황임. 참여 이후 보완이 아닌, 기획 단계에서부터 포용적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포용성 기반을 강화하기 바람.
9. 카페 소송 건 관련하여 소송이 한참 진행 중엔 올 초에서야 추가 무단 점유자를 발견하는 등 재단의 소극적 대응이 매우 아쉬움. 시민들이 향유하는 공용 공간인 만큼 향후 소송 진행과 행정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10. DDP 내 운영 정지된 보일러 관련,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보일러 시설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매년 12월 실시하는 자가측정에서 측정 의무 이행이 불가능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 태만임. 향후 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 발생시 소관부서와 소통할 수 있는 보고 체계를 정비하고 DDP 정기 감독을 강화하여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바람.

11. 서울디자인재단이 다수의 관련 용역을 반복하고도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기획역량과 정체성 부재가 드러난 만큼 중장기 계획 수립과 내부 역량 강화가 시급함.
12. 우수디자인상품 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15년 째 한 전시에만 의존하는 등 해외전시 전략·성과관리 미흡으로 전략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중장기 전략이 필요함.
13. 새활용플라자는 재단 본연의 디자인·창업 지원과 거리가 있어 설립 목적과 불일치한 위탁·공간 운용 구조를 재정비하고, SBA 공간 회수·스타트업 지원 정상화 등 개선방안을 용역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 개편이 필요함.
14. 디자인문화를 확산하고 디자인산업을 지원하는 설립 취지와 달리 현재의 서울디자인재단은 축제와 행사를 수행하는 이벤트 회사로 전락한 느낌인데 디자인재단 본연의 역할을 찾아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 바람.
15. 재활용 + 창작 + 디자인 = 새활용인데 새활용플라자 운영과 관련해 인력구성, 업무분장, 사업내용 등 어디에도 디자인재단의 역할이 없음. 개선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16. 동대문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동대문 슈퍼패스 사업 관련하여 할인 비용과 홍보 비용 등 상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상권활성화 효과 검증을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17. 디자인문화본부 조직에서 시설팀이 본부에 속해 있는 현 구조는 일반적인 인사·홍보·안전·시설 기능이 경영지원 부서에 배치되는 조직 원칙과 맞지 않아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체 조직 구조에 대한

재진단이 필요함.

18. 문화본부에는 시설관리나 경영지원 분야의 전문인력이 없어, 사업 중심의 인력구성만으로는 안전·시설·경영관리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편과 인력 보강이 요구됨.
19. 서울디자인재단은 예산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으며, 같은 문제가 2022년 행감에서도 제기되었음에도 2년째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조직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 나. 건의 및 기타사항 ..... 36 건

### **[도시공간본부] — 10 건**

1.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누락 없이 제출하기 바람. 또한, 의원 요구자료에 대해 '볼 필요 없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답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기 바람.
2. 도시계획 규제가 획일적 기준 적용에 머물고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창의적 정책 실험이 제약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 중앙정부의 도시계획 기준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역의 맥락과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서울시와 조건이 맞지 않는 해외사례인 용적이양제를 무리하게 시행하거나 일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으며 결국 유야무야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냉철하게 판단하기 바람.

4. 투기과열지구 등이 아닌 자치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의 불합리성에 대해 중앙 부처에 서울시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기 바람.
5. 종로구청 신청사 예정지인 수송13지구, 오랜기간 소송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사직2구역, 종로구청장이 계속 붙들고 있는 창신1동 남측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오랫동안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기 바람.
6. 공중보행로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줬는데 준공 후 개방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므로 입체공원제도와 관련해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균형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인식을 넓히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7. 신내 택지개발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026년 상반기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바람.
8. 공공시설에 네이밍 라이츠 제도를 도입해 기업 마케팅 수요를 활용하고, 그 수익을 시설 운영 기금으로 활용한다면 서울시는 예산 부담 없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음.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재원 확보가 동시에 가능한 실질적 윈윈 전략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음.
9. 서울시의 개발 및 규제 정책이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시장 원리와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 효과에 대한 성찰과 시장 질서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 됨. 수요·공급 구조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통해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10. 도심 혼잡과 교통 흐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에서도 공중 보행로를 도입해 보행자의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도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균형발전본부] — 10 건**

1. 석재 수급 문제로 감사의 정원 조성의 본 취지가 훼손되거나 평가절하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주기 바람.
2. 서울시는 '디자인서울', 'DDP', '서울디자인위크' 등 다양한 브랜드 사업과 행사를 추진해왔으나, 도시 전체의 구조와 질서를 설계하는 도시디자인 철학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정책이 색·형태·재질 등 시각적 요소 중심의 상품디자인에 편중되어 있음. 도시의 교통·건물·동선·생활 패턴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도시디자인 관점을 정책 전반에 반영하기 바람.
3. 신성장 거점사업 중 '망우리묘지' 명칭을 시민 친화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4. 국가상징공간 조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5. 도시재생기금으로 추진한 「도시재생 거점시설 현황조사 및 분석 용역」은 일반용역이 아니라 학술용역으로 추진했어야 하므로 주의하기 바람.
6.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수립된 청와대 주변 지역 상권 녹지 활성화 계획은 대통령실이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는데, 이제 대통령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기기로 하는 등 상

황이 크게 달라져 잘 관리할 필요가 있음.

7. 광화문광장 감사의 공간 조성사업은 시민의 헌신과 노력을 기리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조형물 설치에 그치지 않고 상징성과 지속성을 함께 고려해야 사업의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음.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석재 등 상징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시민에게 오래 사랑받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 추진하기 바람.
8. '23년 서남권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사업 발굴 시 구로구가 제안 한 온수산단 개발 사업은 최종 선정되지 못했음에도 불구, 온수역 공영 차고지 복합개발 사업과 묶어 관리 중임. 추후에도 자치구가 제안한 사업들 중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주기 바람.
9. 남산 서울타워가 50년 된 역사적 건축물임에도 안전성과 관리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미래 활용성과 지속 가능성은 높일 수 있는 제2 남산타워 건립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잠실 스포츠 마이스 프로젝트에 네이밍 라이츠를 도입해 운영 자금과 시설 보수·개보수 비용을 확보하고, 기업은 브랜드 홍보 효과를 얻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원-원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디자인정책관] — 5 건**

1. 빛공해방지계획수립 용역 수행업체의 제안서에 명시된 공학기술사가 회사 소속인지 확인 후 보고 바람.
2.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위촉된 시민위원들이 미술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위축되지 않고, 비전문가인 시민의 눈으로 보고 참여해 문화예술인

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바람.

3.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은 경찰청과 치안협의체 등과 협의가 필요한 업무로 도시경관보다 범죄예방, 안전 영역으로 보이는데 디자인정책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바람.
4. 디자인정책관 - 디자인재단 - 실국 간 협업 구조에서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해 정책 추진 체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조직 간 협업 구조를 정비하고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5. 디자인 분야에서도 시민이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대표 사업을 마련해 정책의 정체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미래청년기획관] — 4 건**

1.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장학재단 법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과 금융회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 수혜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예산 규모의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지난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7년 3월 시행 예정임.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온둔 아동·청년 지원 등 이미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새로운 법 시행에 맞춰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으므로 차제에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바람.
3. 단기 알바,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로 전전하며 체감 실업률이 20%에 육박하고 청년 1인가구의 60% 이상이 월세로 거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내몰았음. 서울시 청년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서울시 청년 정책을 전제적으

로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이 수반되기 를 간절히 바람.

- 서울시는 단순히 기존 사업을 반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세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설계하는 조직으로 변화해야 함. 행정과 정책은 세부적이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며, 미래 트렌드 변화에 맞춘 정책을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실행해야 함.

## **[글로벌도시정책관] — 6 건**

-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만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참여하다가 실효성이 너무 떨어져서 거의 중단된 것으로 보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돌봄 노동의 수요가 계속 커질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함.
- 전 세계 180여 개국에 약 750만 명의 재외동포가 존재하며, 이 중에는 국회의원·지방의원·공무원 등 현지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적 자원이 다수 존재함에도, 서울시는 이들을 도시외교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현지 사회와 긴밀히 연결돼 있는 재외동포를 도시외교의 핵심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마련하기 바람.
- 재외한인 인적 정보를 정확히 파악·관리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바람.
- 서울 명예시민을 행사 초청, 인터뷰 기고 등 일회성 활용이 아닌 서울의 각종 사업과 정책에 조력자로 적극 활용할 것을 건의함.
- 외국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률이 20%가 채 안되는 상황인데 좀더 다양

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글로벌도시정책관의 조직과 인력 구성의 균형과 정합성을 재점검해야 하며, 서울을 알리는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중복 수행되고 있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타 부서와 혼재된 업무 구조로 인해 중복, 비효율, 방향성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책 총괄 및 기획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함.

### **[서울디자인재단] — 1 건**

1. 서울디자인재단의 종합계획 수립 후 내년 초에 보고해 주기 바람.

**다. 자료요구 ..... 15 건**

### **[균형발전본부] — 1 건**

1. 광화문 광장 조형물 관련

- 광화문 광장 상징 조형물 제작 구매 설치 입찰 관련된 내부 방침서
-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업체별 제한 요청서, 심사 위원회 명단 일체 심사 내역 심사 결과 일체

### **[디자인정책관] — 1 건**

1. 서울형 흡연부스 가이드라인 개발 3종 자료(시범설치 방법, 개발과정, 설치비용 등 세부 내용).

## **[미래청년기획관] — 7 건**

1. 24년도 고립은둔 청년 사회복귀자 통계자료.
2. 동아리 지원사업 관련 청년 관계회복을 위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들(길고양이 배식, 연합 MT 등)이 있는데 해당사항에 대한 사유.
3. 2023~2025년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계획변경 현황.
4. 미래청년일자리 투자심사 관련 여부, 사업 용역을 사무관리비로 시행하는 사유, 사업 용역 긴급입찰에 관한 사유.
5. 청년수당 콜센터 운영 용역 공문 오기 사유 및 수의계약 관련 문서 누락 사유.
6. 2023~2025년도 영테크 상담사 위촉관련 평가 자료.
7. 청년수당 1차모집과 2차모집 서류통과율 차이 사유.

## **[글로벌도시정책관] — 3 건**

1. 서울외국인주민센터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방침서 중 '24년 추진실적 데이터 수정하여 제출(행감제출자료 283p).
2. 테크스칼러십 '25년 생활비, 보험료, 항공료 수혜내역(행감제출자료 473p~474p).
3. 서울글로벌센터 2차 채용심사위원 명단.

## **[서울디자인재단] — 3 건**

1. 보일러 운영정지 건 관련 수도권 대기환경청 고발 건 의견서 제출 내용.

2. 출연금 예산이 영업이익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증빙자료.
3. 재단 중장기 경영전략 관련 과업지시서, 용역 최종 결과보고서, 향후 재단 적용 계획 일체.